

2018

Report

of Trend

2018

정부 및 수도권 지자체

규제완화 정책

동향보고

2018.06. part2 제 100 호

Contents

I . 정부 추진동향

1. 김동연 장하성 김상조가 한 목소리로 혁신성장 목소리 높이는 까닭 3
2. 드론 - 자율차 등 개별과제 나열... 5 개월전 보고내용 '재탕' 수준 4
3. 與 “규제혁신 5 법” ...野 “규제프리존법 먼저” 5

II . 수도권 추진동향

1.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 "... 이재명호 경기 북동부 ' 규제고리 ' 끊어낼까 6

III . 비수도권 (지역) 추진동향

1. 충청권 2 번 연속 민주당 단체장 집권...지방분권 · 수도권규제완화 폐지 등 탄력 예상7

1. 김동연 장하성 김상조가 한 목소리로 혁신성장 목소리 높이는 까닭

01

개요

보도형식	언론기사	보도일자	2018.06.20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BUSINESSPOST

02

주요내용

■ 문재인 정부가 혁신성장 드라이브를 예고

- 지방선거 압승을 발판으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밀어붙일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으나 오히려 선거 직후 혁신 성장에 힘을 싣고 있음
- 기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 완화 등 혁신 성장을 추진하는 데 지지층의 반발 부담이 적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
- 20일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혁신 성장의 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해 규제 혁신을 과감하고 빠르게 추진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의 결과 브리핑
 - 규제 샌드박스 등 규제 혁신 5법을 조기 입법해 혁신 성장 토대를 마련하고 혁신 성장 선도 사업 등에 예산, 세제, 제도 개선을 패키지로 총력 지원할 것
 - 이날 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장하성 정책실장, 홍장표 경제수석, 추미애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등이 참석
 - 이들이 모여 최근 경제 상황을 논의하고 대응 방향으로 혁신 성장과 규제 개혁을 잡았다는 점에 의미
- 최근 정부는 유독 혁신 성장을 강조
- 정부 경제 정책의 3각 컨트롤 타워인 김동연 부총리, 장하성 정책실장,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모두 혁신 성장을 입에 올린 데서 이런 기조가 감지
- 김상조 위원장
 - 19일 범정부 차원에서 혁신 성장의 밑거름이 되는 규제 개혁 노력을 가속할 것
 - 공정위가 혁신 성장을 위한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내는 주도적 역할
- 장하성 실장도 16일 사퇴설을 해명
 -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의 성과를 반드시 이뤄내도록 최선
 - 주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책임지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혁신 성장과 공정 경제까지도 모두 들었음
- 혁신 성장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김동연 부총리
 - 혁신 성장 정책을 전담하는 혁신 성장본부 신설
 - 김 부총리는 15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만나 혁신 성장에 역량을 집중하고 속도감 있게 규제 개혁을 추진
-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혁신 성장을 경제 정책의 한 축으로 삼아왔음
 - 하지만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 경제에 밀려 다소 뒷전이라는 인식이 강했는데 지방 선거를 계기로 혁신 성장에 더욱 힘을 쏟으려 한다는 분석
- 혁신 성장과 이를 위한 규제 완화는 기업 친화적일 수밖에 없음
 - 따라서 규제 완화를 추진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대기업 특혜' 라는 곱지 않은 시각에 부딪힐 수 있음
- 정부가 소극적으로만 혁신 성장 정책을 펴기에는 상황이 급해졌다는 의견
 - 고용 지표와 분배 지표가 악화하고 있고 일각에서 경기 침체 가능성을 제기하는 등 향후 경기 전망을 긍정적으로만 보기 힘들
-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원활히 끌고 나가기 위해서라도 성장 전략으로서 혁신 성장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음

2. 드론 - 자율차 등 개별과제 나열... 5 개월전 보고내용 '재탕' 수준

01

개요

보도형식	언론기사	보도일자	2018.06.28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dongA.com

02

주요내용

■ 규제혁신회의 전격 취소

- 문재인 대통령이 2차 규제혁신 회의를 불과 3 시간여 앞두고 연기한 것은 기존 정책을 재탕한 백화점식 대책의 한계 때문일 가능성이 높음
 - 이대로는 국민이 변화를 체감하지 못해 청와대가 정책라인을 개편하면서까지 강조한 혁신성장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풀이
 - 구호만 무성했지 기업 환경을 옥죄는 규제가 그대로인 현실을 타개하려면 규제당국이 일하는 방식부터 바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옴

5 개월 동안 손 놓은 규제혁신

- 올 1 월 문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혁신 토론회'에서는 신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38 개 규제를 개혁하는 과제가 쏟아졌음
 -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 절차 간소화, 로봇과의 협동작업을 허용하는 스마트 공장 도입, 드론 시험비행 규제 완화, 핀테크 활성화 등 지난 정부 때도 논의됐던 개별 과제가 빼곡히 보고서를 채움
- 당시 문 대통령
 - 과감한 방식, 혁명적 접근이 필요
 - 기업이 새 제품이나 서비스를 내놓을 때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 도 도입
- 27 일 회의 안건
 - 드론 및 자율주행차 육성안, 에너지 신산업 혁신 방안, 스마트공장 보급 및 확산 방안 등으로 1 월 안건의 판박
 - 기존 정책을 확대하는 차원이라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음
 - 기업이 애로를 호소하는 현장의 규제를 외면한 채 4 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벤처, 중소기업 분야에 정책이 쏠려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음
- 핵심 규제 이슈인 인터넷 전문은행과 개인정보 규제 완화 방안은 초기 논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현재 인터넷 전문은행에 투자한 기업은 의결권 지분을 4% 넘게 보유할 수 없음
 -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이 늘어나려면 지분 상한선을 높여야 하지만 일부 여당 의원과 시민단체는 대기업의 사금고가 될 수 있다는 논리로 반대하고 있음
 - 은산분리 규제 때문에 신산업에서 일자리를 늘릴 기회를 잃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
- 개인정보 규제와 관련해 산업계에서는 익명 처리된 개인정보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빅데이터 산업을 키울 수 있다고 보는 반면 시민단체는 규제를 더욱 엄격히 해야 한다고 맞서는 상황

3. 與‘ 규제혁신 5 법’ ...野‘ 규제프리존법 먼저’

01

개요

보도형식	언론기사	보도일자	2018.06.29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이투데이

02

주요내용

■ 여야가 규제혁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규제혁신 5 법’ 이 하반기 국회를 통과할지 주목

- 민주당은 6·13 지방선거 후 첫 행보로 규제혁신 5 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성과에 총력을 다할 계획
- 규제혁신 5 법 : 행정규제기본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진흥융합활성화특별법,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례법 제·개정안
 - 이들 법안은 신산업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적용,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제한되는 권리나 부과되는 의무를 한정적으로 열거, 그 밖의 사항은 원칙적 허용) 적용의 ‘규제 샌드박스 도입 (규제혁신을 위해 일정기간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 내용을 공통적으로 담았음
 - 행정기관에겐 신기술 활용 내용에 대해선 ‘신속 확인 의무’ 를 부여
- 민주당은 지선 이후 줄곧 규제혁신에 대한 발언을 이어감
-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27 일 규제혁신 점검회의를 연기하면서까지 정부부처에 대한 규제개혁 속도를 높일 것을 주문하자 이에 대한 지원사격에 나서는 모습
- 사실상 규제혁신을 뒷받침해야 할 입법과제들은 대부분 국회에 발이 묶여 있기 때문
- 이낙연 국무총리는 28 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 법안 4 건과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포함한 규제혁신 법안들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장기간 처리되지 않고 있음
 - 법률이 바뀌지 않으면 행정부가 할 수 있는 규제혁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
 - 규제 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성장을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 과제
 - 정부가 소극적인 생색대기로 규제 개혁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
 - 대한상공회의소 정책간담회에서도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고 우리 당이 국회에 제출한 ‘규제혁신 5 법’ 도 조속히 입법화하도록 전력
- 여야 모두 규제혁신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규제혁신을 위한 세부적인 방향은 다름
- 야당은 19 대에 이어 20 대 국회에 다시 제출된 규제프리존 특별법부터 통과시키자는 입장
- 민주당은 야당이 이전 정권 때 규제 개선을 추진했기 때문에 반대할 명분이 없고, 야당이 내세우는 규제프리존법의 대다수 내용들도 규제혁신 5 법에 포함했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
- 김태년 정책위의장
 - 규제혁신 5 법을 내놓으면서 규제프리존법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 등 공익적 가치 훼손, 대기업에 대한 특혜 제공 등 논란이 존재해 추진이 곤란하다는 측면이 있음
 - 규제혁신 5 법 중 지역특구법에 기존 규제프리존법에 포함된 특례 중 지역전략 산업용 특례 (60 개) 를 제외한 나머지를 최대한 반영
- 규제혁신 5 법이 하반기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정부여당은 전기·자율주행차, IOT(사물인터넷)·가전, 반도체·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산업 5 대 신산업 육성 정책의 성과 창출도 함께 주력할 계획

1.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 "... 이재명호 경기 북동부 '규제고리' 끊어낼까

01

개요

보도형식	언론기사	보도일자	2018.06.20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중부일보

02

주요내용

■ 안보' 와 '수질' . 경기 북부와 동부의 발전시계를 30 년 전부터 붙잡고 있는 미명 (美名)

-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철책과 맞닿아있는 경기북부는 접경지역이라는 특성상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묶여 개발은커녕 부대 인근 주민들은 피해를 감수
- 수도권 2 천 500 만 명의 먹는 물이 공급되는 팔당수계지역이 지정된 경기동부 또한 수질보전이라는 명목으로 인접한 강원도보다도 낙후된 채 역차별을 감내
-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 : 민선 7 기 경기도정을 이끌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선거기간 내내 강조했던 말
- 경기 북· 동부 주민들은 이 당선인이 30 년 넘게 이어져온 규제의 고리를 끊어주길 바라고 있음
- 19 일 경기도
 - 경기도내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2 천 363 k㎡로 이중 79% 인 1 천 889 k㎡가 경기북부에 집중된 상태
 - 서울시 면적의 3 배 크기에 달하는 땅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묶여있는 것
 - 기초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연천군은 전체 행정구역의 97%, 파주시는 90%, 김포시는 80% 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연천과 파주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면적은 서울의 전체면적 (605 k㎡) 보다 큼
 - 군사시설 보호구역내에서는 건축물의 신· 증축과 토지 지형 변경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
 - 경기동부의 경우 양평군· 광주시· 여주시· 이천시· 용인시· 남양주시· 가평군 등 7 개 시· 군 전체면적 (4 천 271 k㎡) 의 49% 에 달하는 2 천 97 k㎡가 팔당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상태
 - 이는 경기도 전체면적의 21%, 서울시 전체면적의 3.5 배에 달하는 규모
 -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 팔당특별대책지역내에서는 일정규모 이상 공장· 양식장· 집단묘지· 골프장· 골프연습장 등의 설치가 금지되며 어업행위 또한 허가되지 않음
 - 개발행위제한으로 인해 수질보호를 위해 만든 법이 소규모 난개발을 조장해 오히려 수질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는 것
- 이번 민선 7 기 인수위원회인 '새로운경기위원회' 발족과 함께 경기 북· 동부 지역의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음
 - 그간 북부 접경지역 및 군사시설 주변 지원에 관한 법률을 꾸준히 발의해 온 박정 국회의원 (파주을) 이 평화통일특구특별위원장 , 팔당수계에 위치한 광주시에 지역구를 둔 소병훈 국회의원 (광주갑) 이 농정· 건설분과위원장으로 인수위에 참여
 - 이 당선인은 공약으로 경기북부와 동부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약속했지만 , 중앙정부와 국회의 동반 노력 없이는 미완의 공약으로 남을 가능성이 큼
 - 박정· 소병훈 의원의 인수위 참여로 정부—국회—경기도간 수도권 규제혁신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
- 도 관계자
 - 북부의 경우 주한미군 공여구역 개발 및 통일경제특구 지정 , 동부는 상수원다변화 등 정부의 협력· 지원 없이는 풀 수 없는 난제가 걸려 있음
 - 민선 7 기 경기도가 중앙정부 및 국회와 수도권 규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지가 관건
-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 때 공약으로 내놓았던 규제 혁신 5 대 법안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

1. 충청권 2 번 연속 민주당 단체장 집권...지방분권 · 수도권규제완화 폐지 등 탄력 예상

01

개요

보도형식	언론기사	보도일자	2018.06.20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대전일보

02

주요내용

■ 지방자치 분권 · 국토균형발전 · 수도권규제완화 폐지 · 행정수도 명문화 등 충청의 발전을 위해 풀어야 할 굵직한 과제가 산적

- 우선 지방자치 분권은 탄력을 받고 추진될 것으로 예상
 - 이번 선거를 통해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에 국민적 지지가 확인된 만큼 개헌 실패 등으로 눈에 빠져있던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힘이 실린다는 분석
 -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중앙정부 권한 및 사무의 지방이양을 약속했지만,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전제조건인 개헌이 이뤄지지 않으며 추진 동력을 상실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음
- 하지만 이번 선거가 집권당의 압승으로 끝난 만큼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청정분권과 균형발전 공약과 정부의 의지가 맞닿아 자치분권 · 균형발전 관련 정책이 다양한 방법으로 속도를 낼 전망
- 수도권 규제완화 폐지와 행정수도 명문화 등의 현안은 지역의 목소리를 꾸준히 중앙에 전달하는 것이 중요
 - 특히 이명박 · 박근혜 정권이 주도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직격탄을 맞은 곳은 충남
 - 충남의 2007 년 기업유치는 378 개나 됐지만, 이후 규제 완화 정책으로 2011 년 92 개, 2014 년에는 32 개, 지난해에는 23 개까지 감소
 - 동시에 이미 조성된 산업단지의 분양률도 떨어지면서 지속적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폐지를 촉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 양승조 충남지사 당선인은 물론 민주당도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꾸준히 반대해왔던 만큼 앞으로 4 년 간이 제도를 개선할 적기라는 평가
- 행정수도 명문화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
 - 선거를 앞두고 행정수도 명문화에 대한 여론이 들끓었으나 청와대 개헌안에 세종시 명문화를 법률 위임으로 결정되면서 지역에서는 반발이 컸음
 - 민주당도 세종시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를 당론으로 채택했으나 청와대 개헌안에 따라 법률 위임으로 가닥이 잡았음
 - 자유한국당은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를 자체 개헌안에 언급조차 하지 않았음
 - 여야 모두 세종시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에는 적극적이지 않은데다 선거의 참패로 야당이 재정비 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정치 일정을 고려했을 때도 개헌안 논의가 조속히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